

# ‘과학’과 ‘정치’를 생각한다

글\_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경영과학 박사 ahs@hankyung.com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고비용 구조는 비단 고임금, 높은 교육비와 주택비, 투쟁적 노사관계 때문만은 아니다.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비생산적 정치풍토에 있음은 두말 할 것도 없다. 이런 고비용 구조가 지금 기업들로 하여금 우리 나라를 등지게 하고 있다.

대선 비자금 수사가 확대되면서 정치개혁 요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번에도 정치권이 개혁을 제대로 못하면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도 희망이 없다. 세상에 ‘돈 주고 뺨 맞는대’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업들만 만신창이가 된 꼴이다.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없는데 미래의 성장동력을 말하는 것이 차라리 공허할 뿐이다. 과학기술의 수요처이자 기술혁신을 담당할 기업들이 이런 처지라면 과학기술중심사회라는 것도 정말이지 ‘말의 성찬’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른다.

지금 여러 가지 정치개혁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과학기술계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다. 지금의 고비용 비효율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한다면, 이른바 ‘정치꾼들의 경쟁’, ‘그들만의 정치적 독과점 구조’를 혁파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비례대표제 확대를 피해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제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책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을 충원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역구 관리에 대한 부담을 떨쳐 버리고 정책개발과 입법에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다. 선

거비용도 줄이면서 제대로 된 정당정치, 제대로 된 입법부를 만드는 길인 것이다. 이런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명부를 작성하고 정당투표에 의해 의원을 선출한다. 정당이 능력과 도덕성 등 자격을 갖춘 인재를 공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공천을 정당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 둘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과학’과 ‘정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얼핏 생각하면 둘은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커플이다. ‘아니, 아무 상관도 없는 것 아니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과연 그럴까.

과학과 정치는 생각해 보면 묘한 긴장관계에 있다. 자유와 평등만 해도 그렇다. 정치가가 말하는 자유와 평등과, 과학자가 말하는 그것은 곧잘 충돌하기 십상이다. 창조와 혁신을 놓고도 마찬가지다. 그런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 ‘정치가의 양심’이라는 말은 없어도 ‘과학자의 양심’이라는 말은 있다. 그것만으로도 더 이상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긴장관계에 있는 정치가 스스로 과학의 가치를 그저 보장해 줄 리 없다. 모든 것은 어찌 보면 ‘투쟁의 산물’이고 ‘희생의 역사’였다. 과학기술도 예외가 아니라고 필자는 배웠다. 정치가 변화하길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이제는 과학기술계도 나서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계를 누가 대변할 것인가부터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행정부 지배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 과학기술자가 행정부의 보호에 매달리고 애걸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가. 아

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는 과학기술자들이 종종 목도하는 행정부의 독단을 견제할 필요가 있는 시대이기도 하다.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스스로 자신을 대변할 임계규모(critical mass)의 의회 진출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과학기술계의 국회 진출은 절실히 보인다. 정부는 혁신시스템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모방'이 아닌 '창조'를 원한다면 더 이상 정부 주도의 혁신시스템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혁신시스템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혁신도 '시장원리'로 접근할 때 가장 힘을 발휘한다. 또 그것이 경쟁력을 보장하는 시대다. 민간 주도 혁신시스템은 기업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기술혁신 기업들을 누가 대변할 것인가. 기술혁신 기업들의 근본이 과학기술에 있다고 한다면 그저 단순히 기업인 출신들이 이들을 대변할 수 있다는 생각은 대단한 착각일 수 있다.

오늘날 정치인들은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과학의 대중화', '대중의 과학화'를 말하고 있다. 좋은 일이다. 사실 과학기술중심사회의 가장 분명한 지표 하나를 들라면 그것은 단연 과학의 대중화, 대중의 과학화에 얼마나 앞서 있느냐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다. 과학의 대중화, 대중의 과학화에 '정치'라고 예외일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다. 아니 정치 분야야말로 핵심이다. 정치인 중에서, 국회의원 중에서 과학기술자 출신이 얼마나 되느냐는 과학의 대중화, 대중의 과학화의 가장 간단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우리의 현주소가 어떤지는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정치'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과학기술계가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이 되려고 엄청난 비용을 쏟아 붓는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일단 진출하고 보면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막대한 '지대 추구(rent-seeking)'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패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정상 이윤을 넘는 지대의 존재는 언제나 새로운 '진입자'에 의해 깨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시장경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시장경제가 아니다. 이런 지대 추구가 깨지지 않으면 다른 분야까지 위축시키게 된다. 사실 이공계 기피만 해도 그렇다. 이공계에 대한 유인책만으로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다. '진입장벽'을 쳐 지대를 추구하는 다른 분야를 동시에 깨야 한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정치다. 여기서 지대를 깨려면 앞서 얘기한대로 비례대표제의 확대도 한 방법이다. 그 지대를 봉사와 책임감 그리고 명예로 대체하려는 세력이 나서야 한다. 과학기술자야말로 제격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더 이상 '대통령이 어떻게 알아서 해 주겠지', 혹은 '정당이 어떻게 알아서 해 주겠지'하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정당이 무엇인가.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것이고 그 기반이 지지층(vote)이다. 이 연계 고리를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

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voice-up). 하지만 여기저기서 목소리를 높인다고 모두 되는 것은 아니다. 중구난방이어서는 무시당하기 십상이다. 그러다가는 정당에서 내버려둬도 괜찮다고 생각할 게 뻔하다. 따라서 '결집된 목소리'가 필요하다. 그래야 겁을 내고, 그래야 귀를 기울인다. 일정한 몫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냉엄한 정치의 현실이다.

과학기술자는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 그것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 미래 사회는 지식이 중요하고, 아이디어가 중요하고, 연구 개발이 중요하다는 시대 아닌가. 사실 과학기술계는 지금 중요한 '레버리지(leverage)'를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계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정당은 과학기술자의 '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 자체로 미래를 담보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까지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과학기술계 외의 다른 지지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레버리지를 십분 활용하면 과학기술계는 모든 것에 주체적일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결정적인 전제조건이 있다. 과학기술자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집단'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해야 한다. 과학기술자에게 국민의 신뢰와 사랑보다 더한 힘을 주는 것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새해에 과학과 정치를 생각하는 이유는 단지 올해 총선이 있다는 그것 때문만은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의 장래가 걸린 일이다. ㉔